

첨부 3. 관련 언론보도 목록(참고자료)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산정 및 뷰티풀파크관리공단 관련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참고를 위해 보도현황을 정리합니다.

- ※ 아래 자료는 사건의 배경 및 외부 문제제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 기사에 포함된 의혹·주장·평가를 본 제보에서 확인된 사실로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기사 원문은 아래 언론사명과 기사제목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기사제목
1	경인일보	2026. 4. 22.	뷰티풀파크관리공단 '59억짜리 특혜' 내부 고발
2	아시아타임즈	2026. 4. 22.	인천뷰티풀파크관리공단 '수십억대 특혜 의혹' 양심선언...시민단체 "철저한 조사 필요"
3	포커스인천	2026. 4. 29.	"폐수 55배 방류 '뷰티풀파크공단' 위탁해지하라" 시민단체, 인천시 직무유기 맹폭
4	한국미디어뉴스	2026. 4. 30.	시민단체, 뷰티풀파크공단 비리 의혹 인천시 무책임 행정 규탄

뷰티풀파크관리공단 '59억짜리 특혜' 내부 고발

2026-04-22 20:05 게재

팀장 양지웅씨, 인천시청 기자회견
폐수처리비 입주업체 3곳 예외 적용
오염 농도 조작 등 '불법 협약' 주장



2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뷰티풀파크관리공단 직원이 공공폐수처리 비용 부담금 부과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서구에 있는 뷰티풀파크관리공단(옛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특정 업체들에 불법적으로 폐수처리 비용을 깎아줬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하 공단) 수질관리부 팀장 양지웅씨는 2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이 입주 업체 3곳과 불법 협약을 맺고, 지난 5년간 약 59억원 규모의 폐수처리비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름을 바꾼 공단은 기계·목재·전자·식품 분야 등 약 1천100개 기업이 입주해있는 뷰티풀파크를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인천시로부터 사무 위탁을 받아 입주 기업 등록과 산업단지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며 폐수 배출 시 각 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인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보면 공단은 매달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폐수를 채취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COD(화학적 산소요구량)·SS(부유물질)·T-N(총질소)·T-P(총인) 등 5개 항목 농도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부과한다. 폐수에 해당 성분들이 많을 경우 더 많은 부담금이 산정된다.

양씨는 공단이 2021년부터 식품업체 3곳과 협약을 맺고 이 업체들에만 예외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폐수의 실제 수질 대신 2020년 측정된 평균 농도를 5년째 그대로 적용해 비용을 낮춰줬다는 것이다. 양씨는 당시 오염물질이 적은 시기에 채취된 폐수였기 때문에 오염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만큼 비용도 적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불법적인 협약을 통해 지난 5년간 A업체 약 35억원, B업체 약 20억원, C업체 약 3억6천만원 등 모두 59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며 “당시 왜 이런 협약이 체결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타 업체와는 다른 특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약이 맺어진 이후 해당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는 공식적인 채취와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오염이 심한 폐수가 유입될까 우려하는 마음에 자체 수질검사까지 진행했다”고 했다.

양씨는 또 해당 업체들이 배출 허용 기준의 33배가 넘는 ‘노말헥산’(기름 성분)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배출 허용 기준은 30mg/L이지만, 일부 업체의 폐수에서 1천mg/L의 노말헥산이 검출됐다”며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면 정화를 담당하는 미생물이 죽어 처리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공단이 맺은 불법 협약에 관한 진정서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양씨는 “폐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다른 입주 업체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생각에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언론에 관련 제보를 한 이후, 공단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내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하고 메신저 대화까지 복구했다.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공단을 관리하는 인천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 측은 비용부담금 특혜와 관련한 경인일보 질의에 이날 답변을 하지 않았다.